

총파업 특보 19호



피의자 김재철의 궤변

“저도 상식이 있는 사람입니다”

역시나 뻔뻔했다. 밤샘 조사를 받고 검찰청사를 나오면서도 김재철은 궤변을 늘어놓았다. 방송 장악과 MBC 파괴를 인정하지도, 일말의 책임감도 나타내지도 않았다. 우리가 알고 있던 김재철의 모습 그대로였다.

“양심대로 했을 뿐” 김재철의 양심은?

오늘(7일) 새벽 3시40분쯤 조사를 마친 김재철에게 조합은 국정원과의 공모 여부를 다시 물었다. 그는 “(검찰청에) 들어갈 때 했던 얘기 그대로”라며 답변을 완강히 거부했다. 이에 ‘방송 장악이 없었다’는 말의 의미를 되물자 “양심대로 했을 뿐”이라며 “MBC가 권력에 장악이 왜 되냐”고 반문하기까지 했다.

적반하장도 도를 넘었다. 징계와 부당 전보의 피해자이기도 한 조합원들이 MBC 몰락의 책임을 추궁하자 “여러분이 잘못 생각하는 것”이라는 황당한 소리를 늘어놓았다. 인사 책임에 대해선 “혼자 합니까, 임원들이랑 (했다)”며 책임을 당시 임원들에게 떠넘기는 듯 답변했다.

김재철식 화법도 빼놓지 않았다. “나이가 예순 다섯이다”, “사회부 기자도 다 했다”는 식상한 레퍼토리에 이어 조합원들에게 “MBC (보도국) 몇 기”냐고 물어보더니 ‘자신은 14기’라며 ‘선배’임을 내세웠다. 또 해직자들에게는 “항상 미안하다”면서도 부당 해고는 아니라고 주장하는 ‘자아 분

열’ 발언도 이어졌다.

10분 정도 장광설을 떠벌리며 짜증스럽게 조합원을 밀치기도 하던 김재철은 “저도 상식이 있는 사람입니다”라는 말을 남긴 채 택시를 타고 도망치듯 사라졌다.

“목숨 걸고...” 뻔뻔한 거짓말

앞서 어제(6일) 오전 김 전 사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 장면에서도 후안무치는 그대로 드러났다. 물질적,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은 조합원들을 뒤로한 채, 그는 “MBC는 장악될 수도 없고, 장악할 수도 없는 회사”라는 거짓말로 말문을 열었다.

조합원 해고, 보도 통제, 대체인력 채용 등이 국

정원과 공모한 것이냐는 질문에 “(입사) 31년 만에 사장이 됐다. 공채 기자 14기로 입사했다”며 동문서답을 하더니, “나는 낙하산이 아니다”며 억지를 부렸다.

또 청와대 지시가 있었냐고 묻자 “목숨을 걸고 단연코 MBC 문화방송이, 언론 장악이 될 수 없다”고 뻔뻔하게 답했다. “정권으로부터 독립성을 지키지 못하면 한강에 빠뜨려도 좋다”던 그 장면과 다를 바 없었다.

국정원의 국내정치 공작, 특히 방송 장악 계획이 날날이 드러나고 있다. 김 전 사장 역시 ‘방송 장악’과 ‘MBC 파괴’의 주범으로 구속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김재철 구속은 MBC에 쌓인 적폐를 걷어내는 본격적인 신호탄이 될 것이다.



우리는 당신이 한 짓을 알고 있다

입만 열면 거짓말이요, 앞뒤도 맞지 않는 궤변이다. 'MBC 파괴의 주범' 김재철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되면서도 여전히 뻔뻔하고 무책임했다. 듣는 이들의 역장을 무너뜨리는 그만의神通한 능력이다. 하지만 우리는 정확히 알고 있다. MBC의 몰락은 그가 낙하산 사장으로 MBC에 뛰어들어 틈 순간부터 시작됐다.

국정원 지침이 핏빛 살생부로

지난 2010년 3월, 국정원은 'MBC 정상화 전략 및 추진방안'이란 제목으로 MBC 파괴 시나리오를 작성했다. 이 13장의 문건을 통해 국정원은 MBC 인적 청산부터 시사프로그램 퇴출, 노조 파괴 방안을 세세하게 지시했고 민영화를 통한 MBC 무력화 계획까지 세웠다.

문건 작성 시점은 김재철 사장 부임 시기와 정확히 일치한다. 그리고 국정원의 지침은 김재철을 통해 핏빛 살생부로 실행됐다. 사장 부임 사흘 만에 MBC 모든 관계사 사장들에게 일괄 사표를 요구하고 28곳 중 22곳의 사장을 물갈이했다. 이어진 국장·부장급 간부에 대한 '친북좌파' 낙인과 퇴출 역시 국정원 지침 그대로였다. 당시 "김재철이 큰 집에 불려가 조인트 까이고 MBC 내부 좌파를 정리했다"는 김우룡 방문진 이사장의 폭로가 철저히 기획된 인사 학살이었음이 사실로 확인됐던 것이다.

MBC 간판 시사프로그램 폐지, 출연진 블랙리스트도 김재철이 주동했다. <후플러스>, <W>를 가차 없이 폐지시켰고, <PD수첩> '4대강 수심 6m의 비밀' 편은 직접 사전시사를 요구하다 결국 불방시켰다.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의 진행자 김미화 씨에게는 대놓고 프로그램 하차를 압박했다.

정점은 노조원들에 대한 끝없는 해고와 징계의 피바람이었다. 그는 '노조 활동은 엄중히 징계하고 주동자는 사법처리로 영구 퇴출하라'는 국정원의 지침대로 신나게 칼날을



휘둘렀다. 첫 본보기로 2010년 39일 파업의 책임을 물어 이근행 당시 노조위원장을 해고했다. 2012년 파업 국면에는 정영하 노조위원장, 박성호 기자회견 등 6명을 해고하고, 80명 넘게 '묻지마 징계'를 자행했다. 알량한 사장 자리 하나 연명하고자 MBC를 정권에 갖다 바치고 동료들을 사지로 몰아낸 것이다.

부인·모르쇠... 철저한 법의 심판 받아야

그는 여전히 부인과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당시 국정원의 MBC 출입 담당관은 검찰 조사에서 김재철 등 경영진에게 국정원 문건 내용을 전달하고 논의했다고 밝혔지만, 그는 "국정원 직원을 만난 적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김우룡 이사장의 '조인트' 발언도 모른 척이다. 프로그램 하차를 중용받았던 김미화 씨의 구체적인 증언에도 불구하고 "인사만

했다"며 발뺌했다. 뻔히 드러난 사실조차 부인하고 보는 적폐들의 공통적인 기억법이다. 온갖 해고와 징계에 대해서는 임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비열함까지 보이고 있다.

하지만 모든 증언과 증거는 김재철을 가리키고 있다. 아무리 법적 책임을 피하고자 안간힘을 써도 진실을 숨길 수 없다. 무엇보다 일터에서 쫓겨나고 업무에서 배제돼 고통을 받았던 조합원 한 명, 한 명이 생생한 증인이다. 하는 말마다 거짓말인 그가 아무리 '목숨을 걸겠다'고 해도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에게 남은 것은 그동안 권력과 공모해 저지른 온갖 악행에 대한 철저한 법의 심판뿐이다.

"이제는 김장겸이다"

김재철이 MBC 몰락의 시작이었다면, 그 완성은 바로 김장겸이다. 김재철 사장 시절 이미 실세 부장으로 왜곡·편파 보도에 앞장섰던 그는, 권력의 입맛에 맞는 MBC를 만든 대가로 보도국장, 보도본부장, 사장까지 승승장구했다. 세월호 참사 당시 학생들의 핸드폰 촬영 영상, 유가족의 우는 장면 금지 등의 치밀하고 조직적인 보도영상지침도 김장겸의 지시 하에 이뤄졌다. 사장 면접에서 노조에 대한 업무 배제 계획을 강조하더니, 사장 부임 후 유배지 발령을 지속적으로 늘려갔다.

지난 9월 부당노동행위 등의 혐의로 노동부 서울서부지청에 소환되면서 그는 "6개월 밖에 안 된 사장일 뿐"이라며 "무슨 부당노동행위를 했겠느냐"고 혐의를 부인했다. 차다 못해 넘치는 증거들도 무시하고, 오로지 적폐 세력에 기대 자리를 연명하려는 안간힘이다. 이 역시 김재철의 모습 그대로다.

이제 김장겸 차례다. 해임은 시간문제지만, 그동안 그가 행한 술한 범죄행위는 단순히 사장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 김장겸과 그 추종자들이 쫓겨야만, 김재철부터 이어졌던 MBC 몰락의 역사와 단절할 수 있을 것이다.

‘빈손 해임’ 이냐 ‘먹튀 사퇴’냐

김장겸, 김재철 따라 돈 받고 자진사퇴?

김장겸 사장 해임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방문진에서 해임안이 통과된 뒤 형식적인 주주총회를 거치면 김장겸은 법적으로 '전 사장' 즉, 자연인으로 돌아가게 된다. 우리는 이미 이후의 과정들을 잘 알고 있다. 지난 2013년 3월 23일 김재철 사장 해임안이 방문진에 올라갔고, 사흘 뒤인 26일 통과됐다. 그런데 “내 말로는 MBC를 나가지 않을 것”이라며 끝까지 버틸 줄 알았던 김재철은 해임안이 통과된 다음 날, 자기 손으로 사직서를 제출했다. 바로 돈 때문이었다. <MBC 임원의 퇴직연금 지급규정> 제 8조에 따르면, 주주총회에서 이른바 ‘잘릴’ 경우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지만 스스로 그만두는 형식을 갖추면 이 돈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공영방송 파괴의 주변, 김재철은 한 번에 현금 3억 원을 챙겨 떠났다.

해임을 눈앞에 둔 김장겸 사장은 지금 14층 집무실에 틀어박혀 퇴직금 계산에 몰두하고 있을 것이 분명하다. 김장겸도 곧 김재철의 전철을 밟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애초에 기자로서의 사명감이나 방송의 공정성에는 관심이 없어 보였던 그였다. 오로지 사리사욕을 위해 보도국에서 기자들을 내쫓고, 뉴스를 망친 공로로 그 자리에 오른 자 아니던가. 만약 이번에도 김장겸이 김재철의 선례를 따른다면, 두둑한 목돈을 챙겨 MBC를 떠나게 된다. 보도본부장 재직 3년과 대표이사 사장 1년을 포함해 4년간의 퇴직금을 합산해 약 3억 5천만 원을 손에 쥐게 된다. 여기에 11월 들어 퇴임날짜까지 계산해 알뜰하게 월급도 지급될 것이다. 그동안 MBC에 끼친 손해를 보상해도 모자랄 판에, 4억 원에 가까운 ‘보너스’까지 받아 나가는 것이다.

주총 해임시엔 돈 한 푼 못받아

그런데 만약 주주총회 소집까지 기다려 해임결의가 이뤄지면 상황은 달라진다.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다면 월급을 제외하거나 퇴직금과 특별퇴직공로금, 특별퇴직위로금 등



그 어떤 돈도 받을 수 없다. 김장겸에게 한 푼도 아깝지만, 그나마 한 달 월급만 주고 쫓아낼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상법> 제 385조에 따라, 임기가 정해진 이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주주총회에서 해임할 경우, 이사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돼 있다. 하지만 이 손해배상 소송은 김장겸에게는 전혀 해당되지 않는다. 법원은 이미 과거 판결을 통해 대표이사 해임의 ‘정당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우선 1) 이사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배된 행위를 하거나, 2) 회사의 주요 업무에 실패해 경영능력에 대한 신뢰가 상실된 경우 등이다. 김장겸 사장은 과거 술한 부당노동행위의 직접적인 당사자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다. 또 보도국장-보도본부장을 거치며 뉴스를 망친 원흉이다. 지난주 방문진 정기이사회에서 채택된 ‘2016 경영평가보고서’도 MBC 시사보도의 공정성과 신뢰도가 크게 하락한 책임이 김장겸에 있다는 점을 공식화했다. 여기에 구성원의 95%가 퇴진을 요구하는 ‘식물사장’으로, 두 달을 넘긴 파업사태에 어떤 해결책도 제시하지 못한 채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 모두 법원에서 판시한 ‘정당한 해임 사유’와 정확히 일치한다.

김장겸이 ‘빈손 해임’과 ‘먹튀 사퇴’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이와 상관없이 노동조합은 그가 자행한 부당 해고와 징계·전보 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그가 회사 돈으로 치른 각종 사적 소송

비용까지 반드시 토해내도록 할 것이다.

“부역자들이 행간 1원까지 돌려받겠다”

김장겸의 뒤에 숨어 온갖 전횡을 일삼은 다른 임원들도 마찬가지다. 모 임원의 경우 긴 재직기간 동안 수억 원의 퇴직금을 매년 꼬박꼬박 정산해 챙겼다고 한다. MBC에서 쫓겨나가기 전에 곳간에 남은 식량은 최대한 빼돌려 자기 배를 불리는 식이다. 이런 임원들 또한 주주총회에서 해임이 확정되면, 퇴직금 지급 근거가 사라지기 때문에 모두 다 토해내야 한다. 이들 임원들은 웅당 해임이 마땅하며, 그 직후 노동조합은 이들로부터 1원까지 탈탈 털어 되돌려 받는 절차에 착수할 것이다. 줄을 대고 부역하며 MBC를 망가트린 대가로 얻은 부당한 사적 이득이기 때문이다. 지역사 사장들에게도 같은 원칙이 적용된다. 스스로 그만둘 경우에는 퇴직금이 지급되나, 역시 주주총회를 거쳐 해임되면 원칙적으로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된다. 특히 부당노동행위를 일삼고 무능으로 회사의 경영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일부 사장들의 경우엔 ‘정당한 해임사유’가 성립돼 나중에 소송을 제기해도 이들이 승소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 지금이 순간 열심히 주판알을 튕기고 있을 지역 적폐 사장들은 이런 점을 분명히 명심해야 할 것이다.

야3당은 당장 '야합'을 중단하라

MBC는 국민의 재산이자 공공재인 지상파를 사용해 방송한다. MBC가 공영방송인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다. 오직 국민만 보고 국민을 위해 방송하는 공영방송이 되기 위해선 한 가지 전제가 필요하다. 권력과 자본으로부터의 독립이다. 하지만, 방송을 장악하려는 무도한 권력과 권력에 영합하려는 부역 적폐들 때문에 MBC는 지금의 모습으로 추락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단지 김장겸 사장을 쫓아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권력으로부터의 완벽한 독립을 최종목표로 한다.

야3당 갑자기 '방송법 개정안' 처리 주장

그런데, 최근 야3당의 기류는 MBC 정상화를 염원하는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국회에 계류된 이후 1년 넘게 방치돼온 방송관계법 개정안에 대해 야3당이 느닷없이 조속한 처리를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저간의 사정을 돌아보면 참으로 뻔뻔하고 한심한 '야합'이 아닐 수 없다. 국회에 계류 중인 방송관계법 개정안의 핵심은 공영방송의 이사 수를 13명으로 늘리고, 사장 선임시 재적 이사의 2/3 이상, 즉 9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청와대가 마음대로 낙하산 사장을 내리꼴을 수 없도록 하자는 취지다. 그러나, 야3당의 주장은 결국 이전에 청와대가 독점했던 권력을 야당까지 나눠 갖자는 '순가락 없기'에 불과하다.

자유한국당 180도 돌변... 김장겸 해임 지연 속셈

우선 자유한국당은 애초부터 줄기차게 방송관계법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지난 2월 "방송법 개정안은 (당시) 야당과 노조의 방송장악으로 이어질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고 주장했고, 실제 자유한국당은 지난 1년 넘게 방송법 개정안 처리에 반대하며 상임위 의사 진행도 방해해왔다. 이렇게 자유한국당이 손바닥 뒤집듯 뻔뻔하게



입장을 바꾼 속내는 뻔하다. 방송법 개정안에 따르면 여야 어느 쪽도 반대하지 않는 인물이야 공영방송 사장이 될 수 있다. 얼핏 정치적 중립성을 표방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유한국당이 노리는 대목은 어떤 사장 후보가 와도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일 것이다. 어떻게 해서든 김장겸 해임을 지연시키고 새 사장 선임 과정에서 발목을 잡으면서 자신들의 지분을 확보하겠다는 검은 속셈인 것이다.

국민의당, '야합'이 MBC 정상화 방안인가?

딱하고 한심한 건 바른정당과 국민의당도 마찬가지다. 당의 운명이 백척간두의 위기에 처한 바른정당이야 그렇다 쳐도 공공연히 공영방송 정상화 의지를 표명해온 국민의당의 행보는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다.

국민의당은 "당초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함께 발의했던 법안이니 이를 통과시키면 될 것 아니냐"는 입장이다. 그러나, 그 의도는 매우 불순해 보인다. 방송법 개정안에 따르면 국민의당과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들은 방문진 이사 6명을 임명할 수 있다. 마음에 안 드는 사장 임명을 저지할 수도 있고 자기들이 추천한 사장이 아니면 안 된다고 몽니를 부릴 수도 있다. MBC에 순가락도 없고 계속 영향력도 행사하겠다는 얘기다.

무엇보다 이해할 수 없는 건 결국 107석을 가진 거대야당 자유한국당이 최대수혜자가 될 게 뻔한 사안에 국민의당이 야합을 자처하고 나섰다. 손톱만큼의 영향력을 얻으



려고 구태를 답습하겠다는 어리석은 꿈꾸이다.

정치권, 공영방송에서 완전히 손 떼야

당초 방송법 개정안은 교육지책의 성격이 강했다. 권력에 장악당한 공영방송의 이사진과 사장단이라도 우선 교체하자는 응급처치 목적의 법안이었다. 그만큼 한계 또한 분명한 법안이었다. 국민의당은 청와대가 독점하던 공영방송을 여야가 나눠 갖자고 주장할 게 아니라 공영방송이 국민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나서야 한다.

170일 파업 때 안철수 당시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 원장은 "방송은 공공재이기 때문에 정권에 따라서 이렇게 경영진이 바뀌고 보도방향이 바뀌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바뀌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방법, 모두의 미래를 위해 계속 사명감을 가지고 진실을 보도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우리 모두의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이 말이 '야당도 얼마만큼은 공영방송 지분을 챙기겠다'는 의미는 아니었을 것이다.

촛불 혁명은 공영방송의 낙하산 사장들에게 사형선고를 내렸다. 공영방송의 완전한 독립을 명령했다. 정치권은 이에 따라야 한다.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옛 방송법 개정안으로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려할 수 없다. 여야는 지금이라도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오직 국민만이 공영방송을 지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새로운 방송법 개정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